

외환 정점 겨는 특검... 김용대 사령관 피의자 조사

(드론작전사령부)

작년 10~11월 무인기 평양투입 지시 의혹의 중심 이상민 前장관 자택·소방청 등 7곳 압수수색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의 정점으로 향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 절차에 17일 착수했다. 이날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소방청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용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지휘 체계를 건너뛰고 드론작전사령부에 밀려 지시가 내려졌다는 현역 장교 녹취와 내부 진술이 특검 수사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녹취에는 "김 사령관이 'V(윤 대통령)'의 지시라 했고, 합참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 "북 도발 유도과 공포 조성을 위해 전 단 살포 및 무인기 노출이 필요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이 지난해 9월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실제 '3인 회동'이 있었는지, 무인기 작전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실제로 드론사 내부에서 전담통을 장착해 무인기를 개조했고, 그로 인해 비행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분석 자료도 제출된 상태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담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더해 김 사령관 자택에서 발견된 유서 파일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유서에는 "이념을 떠나 국민을 위해 작전을 건의했다. 군인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 없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재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앞서 김 사령관은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취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진에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적 회동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34년째 군 생활을 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군인임을 잊은 적이 없다"며 "이렇게 군사 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영상 녹화 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입의로 작성되는 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경찰청 인권규칙에 비추어 적절한 수사 기법이 아닌 부당한 수사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언론 통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과 소방청장 집무실을 포함한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겨레-경향신문-MBCJTBC 등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정황과 관련된 조치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에게 관련 문건을 보여주며 언론 통제 지시를 내렸고, 이 전 장관은 허석근 소방청장에게 경찰 요청 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과 증거가 확보됐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는 이 전 장관이 문건을 손에 들고 있는 장면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허 청장은 국회에서 해당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대통령 안기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 장관, 이만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헌법상 계엄은 내우·외환 등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에만 선포 가능하다(헌법 제77조). 그러나 이번 사안은 선거 패배 직후 선포 시도라는 점에서 헌정 질서 파괴를 위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 제21조의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평가된다.

헌법상 정점은 내란죄(헌법 제87조), 직권남용(제123조), 일반이적죄(제99조) 등이다. 내란죄는 무력행사 전이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조직적 시도로 성립할 수 있으며 언론 통제, 계엄포고령 작성, 군 작전 개입 여부가 핵심이다. 또한 북한 도발을 유도하거나 불안감을 고의 조성했다면 외환죄나 이적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점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그리고 이상민·김용대 등과 공모한 정황이 입증되는지의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확보한 문건, CCTV, 녹취, 유서, 군 지휘체계 자료 등은 윤 전 대통령 책임 소재를 가를 결정적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李대통령 “제헌절, 공휴일로 지정 검토하라”

“헌법정신 다지는 계기돼야” 여야도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17일 공식 지시했다. 대통령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며, 최근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개헌론과 맞물려 헌법 정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이 같은 헌법적 성취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운영됐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공휴일 수 조정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현재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국경일로 남아 있다. 같은 사례였던 한글날은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다시 공휴일로 복원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제헌절의 위상을 되살리

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3일에는 광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헌절을 ‘헌법의 날’로 개칭하고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두 법안 모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의 헌법적 상징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공휴일 재지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제헌절이 헌법의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기는 날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휴일을 넘어선 의미가 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딛고 헌정을 회복한 것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자각이 높아진 지금이 적기”라

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23년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대해 응답자의 88.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 다수가 휴일 지정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공휴일 재지정에는 상징적 효과 외에도 현실적 고민이 뒤따른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기업은 유급휴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공휴일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취약 노동계층과의 ‘휴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상징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하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원식(오른쪽 네번째)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등 참석자들과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란히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등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 중심의 개헌 논의에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연속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 통제 장치, 5·18 정신 수록 등은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비쁜 일상 속, 당신을 토닥여줄 요가 에세이

느려도 괜찮아

아사나(요가 자세)를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몸을 늘리고 비틀고 거꾸로 서는 과정에서 마음이 말을 걸었다.

너무 애쓰지 마라.

괜찮다.

일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살아라.

한영민 지음 | 272쪽 | 15,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